

시선

사설

대학은 우리학교의 미래  
어떻게 열어갈 것인가

학문단위 재조정에는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일이 됐다. 목전의 PRIME사업은 차치하더라도 감소 추세에 놓인 학령인구 현황이나 2018년의 입시제도 개편 같은 외적 요인들을 고려해볼 때, 우리학교가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어 학문단위 재조정은 필수적인 초석이기 때문이다. 중등교육과정에서 문·이과의 구분이 사라지고 학문단위가 통합되는 2018년 이후로는 모든 예비 신입생들이 통합적 사고를 기반으로 진로를 고민하게 된다. 바야흐로 진짜배기 ‘학문간 융합의 시대’가 개막되는 셈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학교의 81개 학문단위가 일상불란한 역할 분담과 학문간 교류시스템 마련을 통해 융합 학문의 시대에 맞는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마땅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실상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이번에 우리신문이 지령 1600호 특집기획으로 준비했던 ‘하나의 경희’ 시리즈에 대해 나타난 구성원의 다양한 반응 속에서는 양 캠퍼스에서 적어도 십 수 년 전부터 이어져오던 고착화된 편견이 여러 지점에서 관측된다. ‘하나의 캠퍼스’에 대한 양 캠퍼스 구성원 간의 인식 차이가 경희의 ‘진정한 하나’를 한번이 가로막아온 지난 날을 상기해볼 때, 수많은 시일이 흐른 오늘날에도 문제의 본질은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 측은 이 문제에 대해 예로부터 지금까지 ‘문제를 문제 삼지 않는 것’을 그 잠재적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사실 통시적으로 돌아켜 보면 유사학과·대외 인식 등 소위 본·분교 문제가 과거부터 꾸준히 제기되는 동안 대학본부는 이 사안을 제대로 직면한 적이 없었다. 자꾸만 ‘현상’으로 불거져 나오는 이 문제를, 대학본부 측은 언제나 ‘캠퍼스 별 운영 원칙’을 되풀이해서 설명하거나, ‘학생 간의 논의’에 맡기거나, ‘캠퍼스 명칭변경’으로 우회하면서 유야무야 넘겨왔다. 힘들고 부담스러운 이수라는 이유로 대학본부가 문제를 외면하며 구성원과 소통을 포기한 사이에, 해당 문제는 자연 치유되기는 커녕 반복·누적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학문단위 재조정은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일이 됐다. ‘학문단위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은 대학본부의 권리가겠지만, 그 정책의 상세와 각론은 대학과 구성원이 긴밀히 협의해서 이뤄가야 하는 것일 데다. 우려스러운 점은 바로 이 지점이다. 대학은 그동안 우리 학교의 미래를 좌우할 거대담론에 대해 구성원과 제대로 된 소통의 시간을 가졌던 경험이 부족하다. 대학이 ‘구성원을 설득해야 한다’는 부담감 자체에 짓눌려있는 사이에 구성원 사이에선 편견과 오해가 깊이 쌓여온 바 있다. 그리고 이제, 자칫 잘못하면 학문단위 재조정 문제에서도 이와 유사한 행보를 밟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민주주의는 ‘불편한 것’을 가까이 감수하는 데서 출발한다. 나와 의견이 다른 상대방과 꾸준히 대화하고 토론하여 의견을 하나로 모아가는 과정이 바로 민주주의다. 구성원 간 소통 여하에 따라, 학문단위 재조정은 우리학교가 미래를 담보하며 ‘진정한 하나’로 나아갈 수 있는 출구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전 구성원을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로 내몰 수 있는 벼랑이 될 수도 있다. 대학은 어떤 자세와 모습으로 우리학교의 미래를 향한 발걸음을 내디딜 것인가.

정경대학 선거세칙  
날치기 통과 논란

미디어 여론동향 2015. 12. 1 ~ 12.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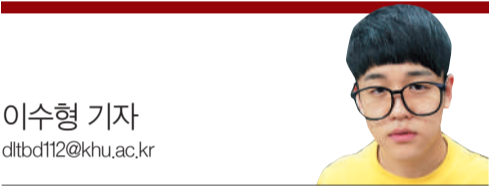
여론동향팀 khunews@khu.ac.kr

SPACE21 사업 소통위원회(소통위) 2차 회의가 지난 2일 본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기체 상환 위한 사업 꾸준한 수익발지 우려”·재정경영원, “수익 창출 안정적 임을 확신”/대학주보 온라인, 2015.12.3) 이날 회의에서 가장 큰 쟁점은 SPACE21 사업 진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이었다. 우리학교는 최근 SPACE21 사업 진행을 위한 기체를 교육부에 승인받았다. 재정경영원 측은 “내년 분의 기체 360억 원을 승인받은 상태”라며 “확실한 사항은 아니나 제 1금융권에 약 3%의 이율로 재원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이율이 확정될 경우 우리학교는 3년간 매년 15억 원, 그 후 17년은 매년 약 37



이주의 주제 - 새로운 학생회비 운영 방안 필요

기름 없는 차는 움직이지 않는다



이수형 기자  
dlbdf112@khu.ac.kr

학생이라면 누구나 “학생회비 꼭 내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해 봤을 것이다. 이는 각 학생회가 학생회비는 자율납부로 모집된다는 것을 고지서에 기재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혼란이다. 이 불친절함은 ‘소통의 부재’에서 오는 오류 중 하나다. 특히 학생회비를 둘러싼 문제는 학생회에 대한 불신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학생자치를 크게 위협한다. 더군다나 학생회비는 학생자치를 움직이는 동력이다. 기름 없는 차는 움직이지 않는다.

지난달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총학)는 ‘학우참여형 회계감사’를 신청한 18개 자치기구의 학생회비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학생회 회계관리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한 감사였으며 우려한 대로 허술한 관리가 드러났다. 다만 자금 관리자들의 전문성 부족에서 온 오류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 총학의 ‘회계 가이드’ 계획은 비전문가의 회계결산을 보완해 줄 방안으로 보인다.

그러나 학생회비 운영에는 결산안 감사와 자금 관리자 교육 이외에도 많은 문제가 남아있다. 현재 단과대학 학생회는 학생회비 예산책정 근거를 학생들에게 공식할 규정상의 의무가 없다. 그러나 지출을 요구하기 전, 그 목적을 알려주는 것이 당연히 옳다. 학생회비 고지 이전에, 구체화된 사업계획과 추정비용을 밝혀 납부된 돈이 어디에 쓰이는

지 공개해야 한다. 소통은 학생회비 납부율을 상승시킬 뿐 아니라, 사업계획을 홍보하고 평가받게 할 것이다. 목적을 밝히지 않고 고지서만을 보낸다면, 누가 내어주고 싶겠는가?

또한 각 단과대학의 학생회비 사용내역 공식방법이 모두 제각각인데다 일부 단과대학에서는 ‘보고 싶은 학생은 학생회실로 직접 찾아오라’는 입장인 탓에, 사실상 대부분의 학생들은 결산안을 확인하기 힘들다. 이는 해당 학생회가 학생회비 운영을 학생자치의 과정이 아닌, 자금을 충당하고 소비하는 수단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불통’의 예다. 게다가 학생복지 사업비용에는 특강강사 초청비용, 각종 대여비 등 적절한 액수의 비용인가를 판단하기 어려운 항목들이 포함돼 있다. 이 때문에 모든 학생회가 학기말에 학생회비 사용내역을 동일한 플랫폼에 공식할 필요가 있다. 학생회비 사용내역을 같은 공간에 공식한다면 학생들이 이를 서로 비교해 적정 액수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

우리학교 학생회비는 학기당 9,500원으로 타대와 비슷한 수준인데 비해, 납부율은 약 75% 수준으로 2015년 1학기 기준 연세대 28.6%, 한양대 36.6% 등 타대의 납부율보다 월등히 높다. 하나 위 납부율은 최근 5년 간 꾸준히 하락해 왔다. 학생회비 납부율의 변화가 가진 의미를 학생회는 유념해야 할 것이다. 비교적 높았던 우리학교 학생회의 신뢰도가 무너지고 있는 현 상황을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 내년 다시 논의될 학생회비 회계의 새 모습이 성공적으로 우리학교 학생자치에 정착하고, 이를 통해 학생회비를 둘러싼 술한 논란을 일부나마 해소시켜주길 바란다.

려운 사람이 뺏이나 뺏을까? 엘리베이터는 몸이 불편한 사람이 먼저 타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적었다. 이 글에는 ‘좋아요’ 97개가 달렸다. 댓글로는 3학기 째 장애학생도우미를 하고 있다는 한 학생이 ‘장애학생이 자리를 비켜달라고 직접 말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도우미가 대신 말해줘야 한다. 물론 (엘리베이터 안에 있던) 사람들이 장애인에 대한 능동적인 배려가 부족했다고 볼 수 있지만, 도우미 활동을 하면서 배려를 요청할 때 이를 무시하는 사람도 없었다. 도우미 학생들은 주저하지 말고 배려를 요청하라’고 적었다.

정경대학 선거에 대한 논란 글(#경희술\_11846, 2015.12.3)도 화제였다. 글쓴이는 ‘투표율이 50%를 못넘어 기간을 연장하는데, 그걸 카카오톡으로 의결했다고 한다. 심지어 카카오톡 투표 기능을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고’라고 적으면 인준하는 걸로 했다고 한다’며, ‘선거 세칙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는데, 재투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적었다. 198개의 ‘좋아요’를 기록한 이 글에는 ‘지난 번 부정선거에 이은 시리즈 2탄인가. 이런 일을 만드는 건 정경대학 전체를 욕 먹이는 것이다. 당사자는 책임지고 사퇴하라’는 댓글이 달렸다.

대학주보는 ‘문제를 만드는  
집단이 아니다

세시봉

이시은 <뉴스팀장>



어느 때처럼 대학본부 취재를 마치고 건물 밖을 나오는 길, 친분 있던 한 교직원으로부터 아주 재미있는 말을 들었다. 지난 주 발행됐던 대학주보 지령 1600호, ‘캠퍼스 통합’ 관련 특집 기사의 반응에 대한 이야기였다. 짧았던 대화의 요지는, 몇몇 교수님들이 기사에 대해 ‘왜 문제를 사서 만드냐, 대학주보 학생들이 관리가 안 되는 것 같다’와 같은 입장을 보였다는 것이었다.

허탈했지만 사실 그다지 놀라운 이야기는 아니었다. ‘괜히 문제를 만들지 말라’는 이야기는 취재과정 도중 수없이 들은 이야기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듣고 들어 머릿속에 쌓일 만큼이 되자, 그들에게 진심으로 묻고 싶어졌다. “정말 저희가 문제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돌이켜보면 대학주보는 지난 1년간 많은 ‘문제’들을 쫓아왔다. 학내는 작은 사회와도 같아, 수많은 갈등이 얽히고설켜는 곳이다. 우리는 항상 그 갈등 속에서 펜대와 함께 서 있었다. ‘후마 교수 막달 발언’ 때가 그러했고, ‘학생회 예산 공식문제’ 때가 그러했고, 이번 ‘캠퍼스 통합’ 관련 특집이 그러했다.

이러한 문제들이 글로 써내려져 세상과 마주하게 될 때마다, 내심 마음속으로는 어떤 기대가 생긴다. 그건 가려져왔던, 혹은 기피해 왔던 ‘사실’들이 보도를 계기로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희망이었다. 하지만 모든 문제점들이 그러하듯, 그 이면엔 첨예한 갈등의 대립과 함께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도사리고 있기 마련이다.

이 모든것을 ‘불편한 진실’로 호도하는

일부 세대는 현재도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

다만 이 모든 것을 ‘불편한 진실’로 호도해버리고, 그저 외면해버리는 일부 세대는 현재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 이들은 이면의 상황이 글로 풀어진 그 자체가 오히려 문제점으로 느껴진다고 말한다. 즉, 현재 ‘있는 문제’조차 없던 일처럼 외면하고, 이야기되면 곤란한 화두는 ‘말하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품고 있는 셈이다. 이 생각이 모이고 모이면, 결국 학내 언론은 ‘글어 부스럼 만드는’ 조직으로 치부돼 버리고, 소속 기자들은 ‘관리가 필요한 학생’으로 변질되는 것이다.

다시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분명 우리는 학교에 소속되어 수업을 듣는 ‘학생’이기도 하다. 하지만 펜대를 잡고, 카메라를 들고 있을 때 우리는 오롯이 진실을 마주하는 ‘기자’다. 비록 학내 언론이지만, 언론을 언론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대학은 그 순간 하나의 ‘백신’을 잃어버리게 된다.

문제를 마주하는 것을 두려워말자. 이를 기자 탓으로 돌리지도 말자. 진실을 마주한다는 것은 그런 것이다. 그리고 그 공론화는 구성원 간의 현명한 의견 도출을 할 수 있는 첫단추다. 1년간 대학주보의 이야기가 불편했을 당신들에게 이 글을 바친다. 물론, 내년에 도 대학주보는 온 힘을 다해 진실을 직시하겠다.

알림

대학주보에  
당신의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대학주보는 늘 열려있습니다. 여러분이 겪은 모든 일을 이야기해주세요. 무엇이든 좋습니다. 사소한 추억부터 어려운 상황까지 함께 나눠주세요. 늘 당신의 옆에 있겠습니다.  
[http://www.mediakhu.ac.kr/khunews/inform\\_us\\_list.asp](http://www.mediakhu.ac.kr/khunews/inform_us_list.asp)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주간)  
발행·편집인 조인원 | 주간 김민전 | 편집장 박송철 | 제작/인쇄 중앙일보미디어디자인(주)  
구독료 년 1만 원 | 구독 02-961-0033-4 | 주소경영 02-441-7317(미래71회)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 | 이메일 [khunews@khu.ac.kr](mailto:khunews@khu.ac.kr)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희1동) / Tel 02-961-003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서현동) / Tel 031-201-3230-2, FAX 031-204-8121